

국무조정실

우110-760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1004호 /전화 730-5400 (행)3859 /전송 737-0109
총괄조정관실 기획심의관실 과장 이병진 사무관 김진남

문서번호 국무총괄 01100 -~~8~~호

시행일자 2001. 1. 20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기획관리실장

보존기간	5 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 개	하	김진남
조정관	김병진		
심의관	이병진		
과 장	이병진		
기안자	김진남		
심사자	이진수	심 사 일	1.20
		협조	

제목 「2001년도 주요국정과제 추진계획」 시달(국무총리지시 제2001-3호)

1. 금년도 5대 국정지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2001년도 주요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후 확정하였습니다.

2. 확정된 동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부처(위원회 포함)에서는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실천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철저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3. 국무조정실에서는 각부처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2001년도 주요국정과제 추진계획」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06, 07, 09, 23~31, 41~57)

2001年度
主要 國政課題 推進計劃

2001. 1. 17

國 務 總 理

◇ 新年辭, 年頭記者會見時 大統領께서 밝히신
금년도 5大 國政指標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20大 主要國政課題를 選定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經濟 및 敎育 副總理가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分野別 長官會議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 내각이 體系的이고 一絲不亂하게 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強力한
政府를 具現해 나가도록 하겠음.

目 次

I. 計劃의 意義	1
-----------------	---

II. 課題別 推進計劃	2
--------------------	---

민주인권국가 구현

1. 개혁 3법의 완비	3
2. 부정부패 척결	4
3. 법질서 확립	5

국민대화합의 실현

4. 지역간 균형발전	7
5. 인사정책의 쇄신	8
6.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9

지식경제강국 구축

7. 4대 개혁의 완성	11
8. 전자정부의 구현	12
9. 전통·정보통신·생물산업의 삼위일체 발전	13
10.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14
11. 인적자원 효율적 개발·활용체제 구축	15

중산층과 서민보호

12.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	17
13. 실업률 3%대 안정	19
14.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개량사업 대대적 추진	20
15. 지방경제의 활성화	21
16.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	22
17. 중산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22
18. 중학교 완전무상·의무교육 실시	23

남북평화협력 실현

19. 장기적·실질적 대북관계 개선	25
20. 확고한 안보태세 및 국제협력 강화	26

Ⅲ. 向後 推進計劃	27
------------------	----

I . 計劃의 意義

□ 지난해 12.21 國務會議에서 5大 國政指標 확정

1. 민주인권국가 구현 2. 국민대화합의 실현
3. 지식경제강국 구축 4. 중산층과 서민보호
5. 남북평화협력 실현

□ 關係部處 會議와 高位黨政會議를 거쳐 금년도 主要 國政課題 推進計劃을 수립

◇ 금년은 국민의 정부 4차년도이고 선거가 없는 해로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

◇ 정부가 역점 추진해 나갈 과제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20개 과제로 집약·선정

◇ 과제별 추진방향, 부처간 협조방법, 일정 등을 마련, 각부처 업무보고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조치

□ 推進計劃은 新年辭와 年頭記者會見에서 강조하신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정기적으로 履行狀況을 철저히 點檢해 나갈 계획

Ⅱ. 課題別 推進計劃

民主人權 國家 具現

- ◇ 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반부패기본법 제정 등 개혁3법을 완비하여 민주인권국가의 기틀 공고화
-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부패 척결
- ◇ 사회질서 확립, 준법운동 확산, 민생침해사범과 반공익사범 척결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

1. 改革 3法の 完備

□ 人權法 制定

-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인권위원회 설립형태를 포함한 법안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상반기내에 법제정 추진
 - *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설립을 주장
- 법제정 6개월내 위원회 발족 등 시행준비에 만전

□ 國家保安法 改正

- 남북협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법·제도간의 괴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그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사실상 死文化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외 여론
 - 북한의 노동당 규약, 형법이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상존
- 앞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당정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중 개정방안을 확정

□ 反腐敗基本法 制定

- 국민여론 수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내에 법제정 추진
 - * 한나라당에서는 중앙선관위와 유사한 독립기구 설립, 특검제 실시 주장
- 법 제정후 시행에 차질없도록 시행령 마련 등 사전준비 철저

2. 不正腐敗 剔抉

□ 資金洗濯 防止를 위한 制度 마련(상반기중)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범죄수익의 부정한 원천을 은닉·가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 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 분석기구(FIU) 설치

□ 不正腐敗 事犯 持續 團束

- 반부패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지검별로 특별수사부 설치·운영
- 구조적 공직사회 지도층비리, 공기업·금융기관 비리, 사회지도층 비리 등에 대해 중점단속

□ 公職者 腐敗防止對策 推進

- 대통령 주재 부정부패 척결대책 보고회를 개최, 정부의지 천명(2월)
 -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분야별·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반부패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방안 마련
-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 실적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

3. 法秩序 確立

□ 社會秩序 確立對策 推進

- 국가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질서,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질서 확립대책 수립·추진(1월중)
- 교통문화지수 비교·측정(2월~6월),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및 단속 강화(연중)로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전개

□ 民生侵害事犯 및 3大 反公益事犯 剔扶

- 강·절도, 조직폭력, 무고·명예훼손, 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
- 식품, 환경, 교통 등 3대 반공익 사범을 강력히 척결
 - 고의적·악질적 식품·환경사범은 구속수사원칙 유지 및 고액벌금 부과, 양벌규정 철저 적용 등으로 실질적 처벌 강화
 - 「교통사고 감소대책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를 2000년 8.3명에서 2003년 4명이하로 감축

□ 汎國民 遵法運動 擴散

- 언론사 공동캠페인으로 공감대 확산 및 범국민적 참여 실현
 - * 1.15 현재 매일경제·법무부 공동캠페인에 192개 기관·단체 참여
- 기관별 특성에 맞는 「1기관 1실천 운동」 활성화 등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 추진

國民 大和合의 實現

- ◇ 지역간 예산균형 배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갈등을 해소
- ◇ 지연·학연에 의한 공직인사를 불식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장의 선발도 객관성을 제고하여 인사정책 쇄신
- ◇ 범국민 참여하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국민화합의 계기 마련

4. 地域 均衡發展 促進

□ 「地域均衡發展特別法」制定 推進

- 지역별 SOC확충, 지역산업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제도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재정의 자율성 제고

□ 豫算의 地域間 均衡配分

- 도서·오지·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 지역별 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

□ 地域別 戰略産業 育成

-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집중 육성
 - △ 부산 : 신발·물류
 - △ 전북 : 자동차부품·첨단기계
 - △ 경남 : 메카트로닉스·항공
 - △ 충청 : 의료산업·전자·정보기기
 - △ 경북 : 섬유·패션·신소재
 - △ 강원 : 관광·애니메이션
 - △ 전남 : 광산업·디지털가전
 - △ 제주 : 관광·컨벤션산업

□ 地方大學의 育成

-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별 자체발전 계획을 평가, 자구노력 지원
-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5. 人事政策의 刷新

□ 地緣・學緣 등 緣故主義 人事 根絶

- 각부처 핵심직위(특정직 포함)에 출신지역・학교 등의 분포를 분석・평가하여 임명
 - 3급이상 고위직중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수시 점검
 - 인사편중이 발견되는 부처는 부처간 인사교류 등 시정조치 요구
- 실・국장급 직위는 중앙인사위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실적・능력중심의 인사심사를 통해 인사편중 시비를 차단
- 기관장(장관・청장)의 인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

□ 政府投資・出捐機關長의 公採 擴大

-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공모를 통해 책임운영체제를 확립
 - 사장추천위원회 또는 사장후보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추천
- 공모제 시행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

□ 開放型 任用方式의 適用 擴大

- 개별 스카웃제도 도입으로 우수민간전문가 유입 확대
- 주요 실・국장급 직위 임용에 직위공모 방식 적용

□ 人事管理시스템 革新

- 부처별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 신설
 - 총무과 → 인사행정담당관(기존인력 활용)
- 인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강화와 다면평가제 적극 시행
-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구축(장기과제)
 - 계급・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확대실시하고 성과주의 보상체계를 도입

6. 월드컵의 成功的 開催 準備

□ 汎國民 參與・和合 雰圍氣 造成

-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에 온 국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조성
- 월드컵 D-500일(1.16)을 계기로 개최도시 시민보고 대회 등으로 국민 참여 열기확산
-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질서, 친절, 청결 등 3대 기초질서확립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 월드컵大會 準備作業 徹底히 마무리

- 금년말까지 10개 전 경기장을 완공하고, 교통・숙박・환경・안전 등 분야별 관련대책 마무리
- 2002 월드컵 필승대책위원회 등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민・관 총력지원 체제 구축

□ 關聯産業 育成 등 經濟・文化的 效果 極大化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 관광산업의 발전계기로 활용
- 월드컵 관련 유망상품・중소기업 지원, 고유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 등 관련산업을 집중 지원
- 월드컵을 계기로 체육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知識經濟強國 構築

- ◇ 2월까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개혁체제로 전환
- ◇ 전자정부를 조속히 구현하여 모든 행정과 서비스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 ◇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부품·소재
수입국에서 세계적 공급 기지로 전환 추진
- ◇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수요급증
분야 인력양성, 교육정보화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체제 구축

7. 4大 改革의 完成

□ 4大 改革의 마무리, 市場시스템에 의한 常時改革 體制로 轉換

-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의 기본틀을 2월까지 완성
- 기업합병활성화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통합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의 상시적 회생·퇴출시스템을 작동
-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신용공여모니터링 강화
- 새로운 건전성 감독(FLC)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전문화하고 금융산업의 기능개편을 유도

□ 參與와 協力の 新勞使文化 實現

- 자율과 원칙에 의한 교섭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 근로자 복지의 제도적 기반 확충

□ 經濟敎育 次元의 對國民 弘報 強化

- 경제장관 지방순회 설명회(3월중) 등을 통해 개혁과제 추진내용, 성과, 향후 개혁방향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
- 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8. 電子政府의 具現

□ 行政서비스의 電子化 推進

- 연내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개 민원분야 행정DB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민원서비스」 실현(2002년 시행)
- 다양한 인터넷 민원창구를 하나로 묶는 통합민원창구(e-Gov) 개설 및 21개 생활민원 On-Line 서비스 실시

□ 政府調達業務의 電子化 擴大

- 조달청에 도입(00.11)된 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산하기관 등에 확대하고, 금년부터 물품 2억원, 시설공사 78억원 이하는 모두 전자입찰 실시
- 다수의 공공기관과 업체를 사이버공간에서 연결하여 물품을 사고파는 「범정부적 전자장터」(B2G e-Market)를 개설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지불, 전자인증제도 등 관련법·제도의 정비 추진

□ 超高速網 高度化 5個年計劃 樹立

- 2005년까지 초고속망 서비스 가구를 2배 이상 확대
* 2000년 400만가구 → 2001년 600만가구(40%) → 2005년 1,350만가구(85%)
- 아파트 구내정보통신망을 초고속화 주거환경에 알맞는 홈네트워킹 활성화

□ 정부혁신추진위원회산하에 電子政府 特別委員會를 설치, 정부혁신과 공공부문개혁 차원에서 綜合計劃 樹立

9. 傳統・情報通信・生物産業의 三位一体 發展

□ 科學技術 投資 擴大

- 미래 유망기술, 핵심산업 생산기술, 공공복지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2000년 35,312억원 → 2001년 41,058억원)
-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5천억원 투입

□ 傳統産業의 IT化 支援

-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2003년까지 3만개)
- 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기계·섬유산업의 디지털화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대폭 제고

□ 尖端技術分野를 次世代 主力産業으로 育成

- 비메모리분야 인력·기술력을 향상시켜 메모리 분야와 균형발전 도모
- 기존반도체보다 천배이상 성능이 향상된 「테라급 나노기능 소자 개발」 착수

□ 디지털 文化컨텐츠産業 成長力量 強化

- 게임 및 문화산업지원센터의 One-Stop서비스 및 현장지원을 강화
- 첨단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사 외주제작비율을 확대(22%→26%)

□ 代替에너지開發 등을 통한 에너지自給 努力 強化

- 태양열·풍력·조력등 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해외유전개발을 본격 추진
 -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을 2%로 확대하고 해외유전을 통한 원유공급비율을 10%로 확대
- 효율이 높고 공해없는 첨단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 개발 집중 노력
 - * 미국, 일본 등 선진각국은 2003~4년경 수소연료자동차상업화 추진

10. 部品・素材産業의 育成

□ 部品・素材産業 基本計劃 樹立

-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5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 전남 대불공단 및 경남 진사공단에 외국의 전문 부품·소재 기업을 본격 유치
- IMT-2000, 디지털방송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범정부 차원의 소요부품 공급대책을 별도 수립·추진

□ 次世代 核心 部品・素材 技術開發 本格 推進

- 기술개발과제 확충: (2000년) 45개 → (2001년) 100개
- 재정지원 확대: (2000년) 500억원 → (2001년) 1,717억원

□ 部品・素材分野의 專門化・大型化 誘導

- 전문화·대형화과정의 비용절감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6월중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
- 신뢰성 인증사업의 본격추진으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출 지원
 - 인증품목 수(누계) : ('01) 45 → ('02) 90 → ('03) 165
 -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원)

11. 人的資源의 效率的 開發・活用體制 構築

□ 中長期 人的資源開發 綜合計劃 樹立(2001 上半期)

- 생애단계별 인적자원개발 전략,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분야별 인력 수급동향 및 전망 등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
-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가칭)제정과 직업훈련·자격제·학원 등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통해 인적지원 인프라 정비

□ 需要急増 分野의 人力養成

-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인력 양성을 도모
- 정보통신, 생명공학분야 등 국가전략 분야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병행

□ 教育 全領域에 걸친 情報化

- 정보활용도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2단계 교육 정보화 발전방안 상반기중 수립
- 초·중등학교 디지털 자료실 설치(96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시범실시, 교원정보화 연수(25%) 등을 통해 교육정보화 가속화

□ 平生教育의 活性化

- 직장인의 계속학습이 용이하도록 고용정보, 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교육 이후의 모든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고 이를 인정하는 교육계좌제, 직업능력인정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中産層과 庶民保護

- ◇ 기초생활보장제, 4대보험 조기정착, 의료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 추진**
- ◇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하강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대책과 장기실업대책을 병행한 종합실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율 3%대 안정**
- ◇ 서민 주택난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 개량사업의 대대적 추진**
- ◇ 신시가지 개발과 재래시장 구조혁신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
- ◇ 정보이용시설 확충과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을 통해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
- ◇ 중산층과 서민 보호차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
- ◇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학교 의무 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

12. 社會安全網의 制度的 定着

□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安定的 定着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51만명에서 155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월 93만원에서 96만원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별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엄정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10만명)에 대해 취업알선·직업훈련·공동창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지원
 - 효과적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후견기관 130개소를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00명 확대 배치(4,800→5,500명)
-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장내용을 널리 홍보

□ 4大保險의 財政安定化 등 運營 內實化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공단인력 감축(1,000명 규모)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

※ 2001년 현재 국고지원율 : 30.2%

- 국민연금가입 미신고자·납부예외자를 축소하여 노령·사망에 대비한 전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
 - 2001년말까지 납부예외율 48→42.5%, 미신고율 7.9→4% 목표
- 고용보험 적용율 제고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 고용보험 적용율(2000.11월말 현재) : 5인이상 81.6%, 5인미만 57.5%
-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재해로까지 확대 추진

□ 醫藥分業의 定着 및 醫療制度 改善

-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약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 의약분업평가단 운영을 통해 분업의 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
 -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불법조제 등 분업정착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의약분업감시단을 통한 지속적 감시·단속 강화
- 의료·약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의 적정수급대책 등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13. 失業率 3%대 安定

□ 일자리 40萬個 創出

- IT, BT 등 성장산업과 문화·관광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용창출
- 1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자금을 추가 조성하고, 장기실직자·소상공인·여성 등의 창업을 활성화
- SOC등 투자사업 예산(19조)중 86.6%, 중소·벤처 지원예산(2.4조원)중 80.1%를 상반기중 집행
- 공공근로 예산(6,500억)의 45%를 1/4분기에 집중투입하여 18만명에게 단기일자리 제공

□ 綜合 失業對策 推進

- 경기의 일시적인 하강으로 인한 실업과 장기 실업대책 병행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채용 장려금 제도를 실업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운영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실직 1년이상 → 6개월 이상)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실직자 조기 취업·지원
 - 실업자 20만명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업종·3D업종을 중심으로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
 -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추가설치, 인력은행을 전문인력 취업 지원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고용안정망 확충
- 기관간, 산업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실업대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

14. 賃貸住宅 建設 및 住宅改良事業 大的 推進

□ 賃貸住宅 5萬戶 追加建設

- 임대주택 미입주 현황, 입주시 불편사항, 미완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및 추가대상지역 선정
- 기존 5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더하여, 2001~2003년까지 5만호를 추가건설
 - 기존계획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금년도 계획물량 1.5만호는 상반기중 조기착공
 - 추가계획에 따른 1만호는 하반기중 사업 착수

□ 老朽 不良住宅 改良事業 推進

- 2003년까지 400개 주거환경지구에 대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3년간 1조 6천억원)
- 주거환경지구내 불량주택 개량자금으로 호당 3천만원을 저리로 지원(3년간 1조 5천억원)
-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호당 3천만원의 이주 전세금을 지원

□ 住宅購入資金 및 專貫資金 貸出 擴大

- 구입자금 : '00년 1조 5,500억원
→ '01년 1조 8,000억원(+2,500억원)
- 전세자금 : '00년 1조 2,000억원
→ '01년 1조 2,000억원(작년과 동일)
- 이율인하 : 7.75→ 7.5%

15. 地方經濟의 活性化

□ 地方經濟 活性化 與件 造成

- 자치단체 투자예산 19.3조원의 8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양여금(5.3조원)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입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사업의 조기집행과 고용창출 등을 종합점검·관리
- 공유지 장기임대, 임대료 인하, 매각대금 장기분납 등 외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 親環境 計劃都市 및 新市街地 建設

- 지역실태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내에 2~3개의 「친환경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시화 북측간석지(323만평) 개발을 추진
- 천안·대전·부산·대구·전주·목포 등 지방의 6개 거점도시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시가지 건설

□ 在來市場 現代化 3個年計劃 推進(2001~2003)

- 재래시장에 주차장 설치, 환경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청결화(Clean Market 사업)하여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1,049억원)
- 지역전통산품과 볼거리를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관광명소화
-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정보화 촉진

16. 地域間・階層間 情報化 隔差 解消

□ 全國民 情報化 教育 實施

-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에 따라 10개 부처의 정보화 교육사업을 지원
- 금년에 주부, 장애인, 농어민, 노인, 재소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

□ 農漁村地域 情報利用施設 擴充

-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비용을 융자 지원(1,500억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 xDSL·CATV망·위성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농어촌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지역 정보접근 시설을 1,698개소로 확대(금년 475개소)

17. 中産層・庶民生活 安定을 위한 稅制支援

□ 俸給生活者 등 庶民層의 稅負擔 輕減

-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지난해 연간 총 2.4조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전제품 등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연간 1조원 경감
- 금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中産層・庶民의 財産形成 支援

-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신설('00. 10월, 12월 세법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제도(한도 연간 300만원)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00.10월 세법개정)

18. 中學校 完全無償・義務教育 實施

- ◇ 1. 18(금) 오전 대통령께서 지시하심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계획을 마련중이므로
- ◇ 구체적인 내용은 1. 19(토) 국무총리
기자회견시 함께 발표 예정

南北平和協力 實現

- ◇ 장기적 · 실질적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3대 기본정책으로 추진

- ◇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공조기반 위에서 남북평화협력을 추진

19. 長期的・實質的인 對北關係 改善

□ 南北間 緊張緩和 및 軍事的 信賴構築

- 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의 정례화, 군사 직통전화 설치 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 쌍방간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등 신뢰구축조치의 단계적 확대
-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사적 지원·협력의 강화

□ 經濟・社會・文化 등 分野別 交流協力の 增進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시행, 남북간 「통행·통신 합의서」 체결 등 남북경협과 인적왕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경평 축구대회」 부활, 남북 단일팀 구성, 학생·교육·문화계 인사 교류 등 분야별 교류협력의 다양화

□ 國民的 合意 雰圍氣 造成 및 對北事業 推進 基盤 強化

-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유도하는 노력 강화
- 국회 「남북관계 특위」 활성화를 통해 초당적 협조 유도
-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분야별 주무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조정 효율화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0. 確固한 安保態勢 및 國際協力 強化

□ 韓・美 聯合 防衛體制 強化

- 한・미 군사정보공유 강화, 연합연습훈련 지속 등 한・미 연합전비(戰備)태세 발전
-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안보협력 및 군사교류 활성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체제 유지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군사위원회 회의 개최(10월중)
 - 한・미 고위급회의 정례 개최(2월부터 매월) 및 국방부 UNC간 수시 협의

□ 韓・美・日 3國間 對北 共助體制의 지속 強化

- 대북정책그룹 조정회의, 각종 정보교류 채널 등 기존의 대북정책 관련 입장 조율과 대화의 틀 활성화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문제와 관련 다자 및 양자차원의 대응을 병행 추진

* 중국과 정치・군사분야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관계 심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 협조 확보

□ 韓半島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을 위한 4者會談 再開

- 미・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4자회담 조기 개최 추진(상반기중)
- 남북이 서명 및 이행주체가 되고 미・중이 지지・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